

| 위원회 동정\_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

#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노사정 합의 본격 추진

송해순 전문위원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주요과제로서 지난해 7.12. 발족한 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짧은 논의기간에도 불구하고 '18.8.21.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제10차~12차에서는 상기 합의의 구체화 논의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통계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실태와 사회안전망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자영업자(무급종사자 포함)는 총 6,711천 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회안전망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 공제'가 있지만,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취업이나 생계지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이어진 발제에서 소상공인정책이 중소기업정책 일부 시책으로 포함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소득보장 등 사회안전망의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12.21. 제11차 회의에서는 합의 구체화 논의 두 번째로 사회서비스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와 관련, 344개소 공립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를 통해 2019년부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립·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8. 제1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활동 중간보고와 작년 합의에 이은 2차 합의 관련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장은 보고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개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후속 합의 공익위원(안)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방안 합의문(안)으로 구분하여 마련하고,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고용보험제도 개



혁,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빈곤대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청년주거대책, 근로장려세제 개편,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19.2.1.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의 사회서비스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발제와 논의 후속으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

임아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투자 확대로 보육·양육 등 주요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확충하였으나 국제 비교 시 여전히 투자 수준이 낮으며, 민간-시장 형성 위주의 공급 확대 전략으로 서비스의 책임성·신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공공 간 역할 및 비중을 균형 있게 조정·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확충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는 돌봄·건강·교육·주거·문화 등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나,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사업·지역에 따른 사각지대·격차 및 중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관은 향후 사회서비스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① 분야별·생애주기별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 보장, ②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③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안건의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 비중에 관한 부분이라는데 동의하면서, 추후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는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제14차 전체회의('19.2.22.)에서 지난 8월 합의한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관련 후속 합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발족취자: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확대 등에 따라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을 위해 '18.7.12. 발족